

반기문총장 “유엔, 여수박람회 적극 지원”

# ‘성공 엑스포’ 든든한 ‘천군만마’

### 온난화 환경재앙 위기 극복 이념 일치...참가국 유치 등 탄력

반기문 유엔(UN)사무총장이 12일 2012 여수엑스포 성공개최를 위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박람회 참가국 유치작업 등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유엔이 박람회에 전시관까지 설치하고 세계 각국 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까지 이끌어낼 것으로 보여 2012 여수엑스포는 성공개최를 위한 든든한 후원자를 얻은 셈이다.

UN, 여수엑스포 후원 배경=반 총장이 2012 여수엑스포에 대한 적극 후원 배경에는 현재 반 총장과 유엔, 국제사회가 총력을 기울여 추진하고 있는 기후변화 대처와 지구 해양환경 보호 노력 등이 여수엑스포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과 맞아 떨어졌기 때문이다.

특히 유엔과 여수엑스포가 지구온난화 환경재앙 위기를 극복하고 인류공영을 위한 글로벌 공동 목표를 갖게 됨에 따라 이의 달성을 위한 공감대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었다.

이날 여수를 찾은 반 총장은 기후변화 대처와 지구 해양연안 보호 등을 강조하면서 여수엑스포의 성공 개최를 당부했다.

반 총장은 이날 “해양과 연안은 인류에게 수많은 혜택을 부여했지만, 인류는 무분별한 행동으로 이를 파괴하고 훼손해 지금은 어족자원 고갈, 생태계 파괴 등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왔다”면서 “이러한 때 2012 여수엑스포는 시의 적절한 주제를 찾았고, 따라서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은 해수면이 상승으로 인해 세계 많은 도서 국가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이 때문에 유엔과 전 세계 국가들이 기후 변화 대처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지난 6월8일 유엔이 세계 해양의 날을 지정한 것도 여수 엑스포의 후원 배경 중 하나로 보인다.

유엔은 그동안 해양환경 보호에 노력해 왔다. 1982년 유엔 해양법이 제정돼 해양 환경 보호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지구정상회의가 열린 1992년 이후에는 해양연안에 대한 보존 관심이 커지고 있어 왔다.

이로 인해 유엔도 2003년 ‘유엔 오션스’라는 산하기구를 만들어 해양과 연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이 여수엑스포를 적극 후원할 수 있는 ‘힘’이 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브랜드 높이자=반 총장은 이날 “여수엑스포 주제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추구하는 특정 주제와 맞다. 그래서 유엔사무총장 자격으로 여수를 찾았다”고 밝혔다.

반 총장이 한국인 사무총장으로서의 여수엑스포에 대한 후원이 아니라, 유엔의 공식적인 입장에서 2012 여수엑스포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힘으로써 행사

의 위상이 그만큼 격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반 총장의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여수엑스포가 추구하는 ‘살아있는 바다 숨 쉬는 연안’이 인류의 미래를 위한 전기를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반 총장은 “각 국이 환경과 기후변화 대처 등에 노력하고 있는 만큼 여수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인류 공존이라는 글로벌 주제를 설정한 2012여수세계박람회가 성공리에 개최된다면 여수와 전남지역의 발전은 물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의 브랜드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내외가 12일 오후 2012 여수세계박람회 홍보관을 방문해 강동석 조직위원장으로 부터 여수엑스포 마스코트인 ‘여니’와 ‘수니’ 인형 선물을 받고 기념촬영 하고 있다. /위탁기자 jrwi@kwangju.co.kr

학생, 교사와 더불어 교육주체의 하나인 학부모를 위한 별도의 지원 법률이 만들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2일 오후 대전시 교육청 대강당에서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주제로 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학부모 정책 추진 방향 시안을 발표했다.

앞서 교과부는 지난 5월 조직개편 때 ‘학부모 정책팀’을 처음으로 구성해 학부모를 위한 정책 의제를 발굴해 왔으며 이날 공청회에서는 향후 추진될 학

## 학부모 지원법 만든다

### 교과부, 교육 참여 보장...연수 등 지원

부모 정책의 주요 내용이 소개됐다.

교과부는 학부모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서는 법령이나 제도 정비와 우선해야 한다고 보고 의원입법 형태로 추진되는 가정·학부모의 자녀교육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한나라당 박영아 의원이 발의한 준비 중인 법률에는 학부모 지원에 대한 근거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학부모의 교육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명시될 예정이다.

또 5년마다 학부모의 자녀교육 증진

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학부모 현황, 학부모 만족도 등 실태조사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된다. 아울러 학부모 교육과 연수를 지원하고 학부모 재단 등 별도의 지원 기구를 설립하며 교육정책이나 학교 정보, 지원체계 등에 대한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교과부는 이날 대전을 포함해 다음달 초까지 전국 6개 지역을 돌며 공청회를 개최한 뒤 학부모 정책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 김정일 이번에도 ‘통큰 선물’ 줄까

### 현정은 회장 면담 여부·방북 결과 관심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은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과거 만남이 주로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하지만 지난 10일 평양으로 향한 현 회장의 이번 방북 목적은 백두산 관광 등 사업상 ‘좋은 일’을 만들려고 갔던 예전의 ‘미션’과는 분명히 달라서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더욱 관심을 끈다.

그간 쌓아온 친분을 고려할 때 김 위원장이 현 회장에 ‘섭섭한 대우’를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은 많다.

이번에 현 회장은 현대아산 개성사업소의 보일러 주유로 일하던 중 북한 체제 비관 등의 혐의로 6달 넘게 북한 당국에 억류된 유모씨를 석방시키고, 1년 넘게 교착상태에 빠진 금강산 관광 등 대북사업의 활로를 뚫기 위해 방북했다.

또 경색 국면인 남북 관계 해빙의 전령사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도 그의 어깨에 걸려 있는 막중한 임무로 거론된다.

현 회장이 과거에 김 위원장을 만날 때는 당면 이슈가 이처럼 무겁지는 않았다.

2005년 7월16일 현 회장은 말뚝인 정지현 현대 U&I 전무 등과 원산에서 김 위원장과 3시간30분간 오찬을 겸한 면담을 진행했고, 독대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과정에서 현 회장은 김 위원장으로부터 백두산 관광사업 독점권과 개성 시범관광이라는 ‘선물’을 받았다.

이어 2007년 10월 말에는 김 위원장이

내주는 특별기를 타고 백두산을 참관하는 등 4박5일의 방북 일정을 마치고 돌아와 백두산과 개성 관광 사업권 확보, 내금강 비로봉 관광 성사 사실 등을 현대상선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김 위원장은 현 회장을 처음 만날 때부터 ‘소매 방북’의 주인공인 고 정주영 명예 회장부터 시작한 현대가(家)와의 인연을 고리로 삼아 얘기를 나눴다.

김 위원장이 현 회장을 처음 만난 2005년 7월 당시 북한 주간지 통일신보는 “김 위원장이 현대가에 대한 의리를 보였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앞서 같은 해 6월 6·15 통일대축전에 참가한 현 회장에게 “금강산은 정몽헌 회장한테 왔는데, 백두산은 현정은 회장한테 줄 테니 잘 해봐라”며 힘을 실어줬다.

이는 김 위원장이 현 회장을 정주영-정몽헌을 잇는 대북사업의 ‘수장’으로 인정한다는 징표로 받아들여졌다. 일각에서는 김 위원장과 현 회장의 친밀한 관계가 현대그룹의 대북사업을 키우는 촉매가 될 것이라는 시각도 많았다.

이후 현 회장은 2007년 10월4일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평양을 방문하고 귀환했다.

그러나 이번 방북은 복잡미묘한 일들이 얽혀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틀어지게 하는 불씨로 작용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연합뉴스

## ‘통일 가늠자’ 남북통합지수 급락

### 작년 1천점 만점에 209.5점...전년비 61.4점 떨어져

한반도 통일의 진척상황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남북통합지수(IKII)가 지난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가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2008년 남북한 정치·경제·사회문화 통합지수는 1천점 만점에 209.5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70.9점)보다 무려 61.4점이나 떨어진 수치다.

부문별로는 정치 부문이 2007년 50.3점에서 지난해 14.4점으로 급락했다.

이는 연구소가 규정한 남북통합단계상 3단계인 ‘남북통합의 진전이 본격화되고 남북협력이 정례화되는 협력 도약기’에서 1단계인 ‘비정기적으로 접촉, 왕래, 교류, 회담 등이 이뤄지는 접촉 교류기’로 후퇴한 것이다.

경제통합지수도 37.8점에서 30.8점으로 낮아졌고, 사회문화통합지수 역시 42.5점으로 전년(58.6점)보다 16.1점 하락했다. 하지만 두

지수는 3단계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치통합지수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된 1992년과 첫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 2000년 급격히 올랐다가 다시 추락한 적이 있지만 이번처럼 정치·경제·사회문화 전 영역에서 급락한 것은 처음이다.

원인으로는 정부의 대북정책 전면 재검토, 비핵화 우선의 대북정책 원칙, 북한의 내부정치 불안정으로 인한 과민한 대응 등이 지적됐다.

남북관계의 진전이 통합의 어느 지점에 와 있는지 보여주는 남북통합지수는 사회문화·정치·경제 통합지수를 낸 가로축과, 의식·관계적·제도적 통합지수를 산출한 세로축으로 구성돼 있다.

보고서는 “정치통합지수가 경제·사회문화 등 다른 영역의 하락을 부추기고 있다”며 “정치 부문의 과잉단절과 악화에 대한 남북 당국자들의 책임의식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아이델리시아**

특별 요리미팅 무대

고품질 해산물, 건강민트, 풍력있는 서비스

아이델리시아

671-1199